

경제계 “코로나19 위기인데...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수용”

“절차 따른 결정인 만큼 존중, 소상공인·기업인에 부담될 것”
올해 대비 1.5% 인상 시급 8720원 “동결했어야” 아쉬움 토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계는 대체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대표로 참여했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4일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경제 여건을 놓고 보면 최소 동결이 필요했다”며 “인상이 결정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7, 기권 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했으며, 사용자위원 2명은 기권했다. 찬성 9표는 모두 공익위원들이 던진 표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우려로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담긴 수정안에는 반대했으나 회의 파행은 막고자 표결에 참여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류 전무는 “공익위원 수정안은 경제 통계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고심 끝에 나왔을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소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러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로서는 1.5% 인상률마저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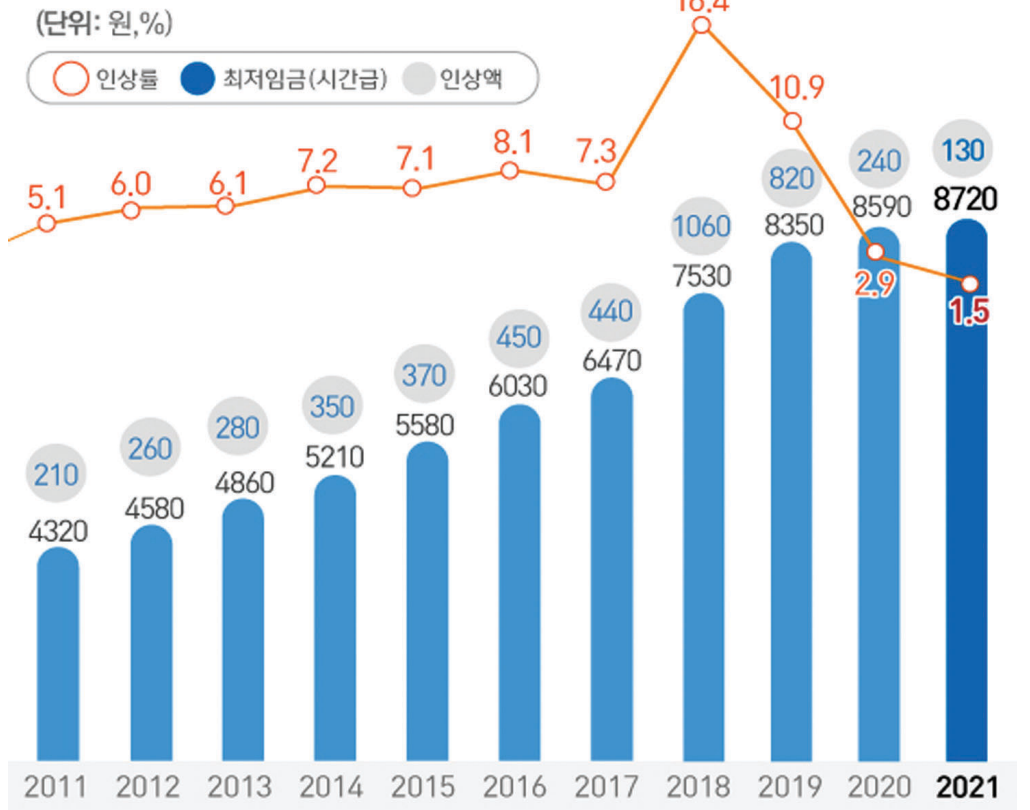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깝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됐다”며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의무화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길기를 기대해 왔다”며 “이 정도의 인상이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상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할 바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러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

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젠 전기차가 대세’...5년내 113만대로 12배 늘린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원 투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 대수를 5년 뒤인 2025년까지 누적 11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9만10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가 5년 뒤에는 12배가량 확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역시 2019년 기준 5000대에서 2025년 20만대로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았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한 축인 ‘그린뉴딜’ 과제에 이런 목표가 담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아 10대 대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 그린뉴딜을 위해선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총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정부는 그린뉴딜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에 역점을 뒀다. 현재 석유중심 수송 체계에서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해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5년까지 사업비 20조3000억원(국비 13조 1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15만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9년 기준 9만

1000대에서 2022년 43만대, 2025년 113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대수도 2019년에는 5000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6만7000대, 2025년 20만대로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도 누적 450대 설치를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폐차가 2020년 기준 106만대에서 2022년 172만대, 2024년 222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그린 에너지’ 과제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사업비 11조 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8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이익공유사업 등을 도입한다. 2020~2022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에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석탄발전과 같이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 과제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사업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교체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외국인 “강남권 알짜매물 구해달라” 다주택자 급매물 ‘씩씩이’ 우려 제기

코로나 사태 둔화하자 외국인 매입 다시 늘기 시작

“최근 들어 서울, 특히 강남권의 수익률 좋은 부동산 매물을 구해달라는 외국인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서울 A 중개법인 관계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급매물 출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외국인의 매물 쓸어 담기 가능성이 제기돼 대응이 요구된다.

1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는 5월 291건으로 전월(252건)보다 16% 늘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특히 강남권 거래량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강남구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5월 35건으로 전월(19건)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늘었다. 서초구도 14건으로 두 자릿수 거래량을 보였다.

그 밖에 양천구(18건), 영등포구(18건), 용산구(16건), 종로구(12건)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위 돈이 될만한 곳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2019년(1~9월) 0.86%로 증가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실제 최근 중국 고위 관료 자녀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두 채를 동시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중개업체를 떠들썩하게 했

다. 한 채 당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잠실 ‘시그니얼 레지던스’의 전체 계약자 중 10%가량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옥의 우수성과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한옥 소유했던 외국인도 늘고 있는 게 중개업계 전언이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비거주 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합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취득세를 더 받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규제나 차등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규제로 국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내놓으면 해외교포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규제를 피해 투기성 매매를 해도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6G 시대 주도’ 선언...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차세대 통신 기술 비전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6G(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관련 백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을 제공한다는 6G 비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쯤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시대에는 △초실감 확장 현실(Truly Immersive XR) △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High-Fidelity Mobile Hologram)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AI(인공지능) 활용 통신 기술 확대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6G에는 최대 전송속도 1000Gbps(1Gbps는 초당 약 10억비트 데이터 전송), 무선 지연시간 100μsec(1μsec는 100분의1초)로,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된다.

6G는 모바일 단말기의 제한적인 연산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최적화 설계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적화하는데 AI가 기본 적용된다는 ‘네이티브 AI’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AI기술 발전과 사용자 정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도 요구된다.